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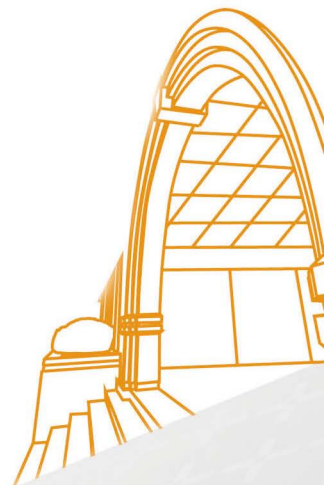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수행과제명 •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 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최유진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수행과제명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 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최유진 연구위원

 Tel: 02-3156-7127

 e-mail: connectj@kwdimail.re.kr

요약

현재 추진 중인 여성친화 지정도시의 ‘공간 조성 사업’은 여성친화 도시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단위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안전이나 건강 및 각종 마을 만들기 등의 중앙정부 도시 만들기 사업들이 아무런 개선 사항 없이 여성친화도시사업에 포함되는 사례가 빈번함.

여성친화도시가 도시 공간 인프라를 성평등 문제에서 접근하는 시도라고 할 때, 공간조성 사업 역시 여성의 공간 사용 편의의 문제를 넘어 여성지위 향상 문제와 연계된 관계 설정이 요청되며, 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의 목표와 범위 등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안전도시나 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이 공간 조성 사업과의 관계 또한 정비되어야 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최유진·문희영·변민수(2013).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정책적 차원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참여 기제를 포함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기 추진되는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인프라의 문제를 성평등 추진과 연계된 문제로 확장시켜 인식하여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임. 도시환경 조성은 이미 형성된 사회적 관계를 공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반영한 포괄적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역 여성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완전히 효과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공간 또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역량 성숙과정의 차이를 반영한 제도 형성을 동반해야 함.

2009년 시작된 여성친화도시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39개로 확산되었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여성친화 지정도시의 ‘공간 조성 사업’은 여성친화도시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단위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안전이나 건강 및 각종 마을 만들기 등의 중앙정부 도시 만들기 사업들이 아무런 개선 사항 없이 여성친화도시사업에 포함되는 사례가 빈번함. 39개 여성친화 지정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 현황은 기본적으로 도로 및 도로 시설물 보수와 보안등 설치 등이며, 보행환경 조성 사업, 광장·공원·녹지·공공용지 등에 대한 각종 개선계획은 주로 여성 또는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과 조명 및 CCTV 설치, 보도 평탄화 사업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음. 또한 블록 단위의 단순한 보행가로 개선사업이 종종 여성친화 거리 등의 사업으로 추진되기도 함.

여성친화도시가 도시 공간 인프라를 성평등 문제에서 접근하는 시도라고 할 때, 공간조성 사업 역시 여성의 공간 사용 편의의 문제를 넘어 여성지위 향상 문제와 연계된 관계 설정이 요청되며, 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의 목표와 범위 등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가.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현황 및 쟁점

1)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현황

전국 39개 여성친화 지정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 관련 사업 현황을 법·제도적 기반과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법·제도적 기반은 여성친화 지정도시의 사업 근거가 되는 조례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도시 공간 관련 가이드 또는 매뉴얼을 통해서 분석하였고, 공간 조성 사업 내용은 개별 시설 단위, 거리 조성 사업 등의 가로 단위,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포함하는 구역 단위와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여성친화 지정도시 39개 중 29개 도시가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및 주거단지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의 필요성을 각 지자체의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몇 개의 지정도시는 지자체 사업 여건에 따라 공간 조성 사업의 범위를 정하기도 하는데, 마포구는 공공이용시설과 주거단지에 대한 개선을, 광주 동·서·남구와 제주도는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을 명시하고 있음.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지정도시는 표준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노약자 또는 장애인의 안전성 및 편의성,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주거에서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고려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관련된 내용에서 보행과 대중교통 안전은 선호되고 있으나 서울 도봉구, 서대문구, 대구 달서구, 수성구와 광주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경기 시흥시, 전북 김제시와 전남 장흥군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과 연관된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 밖에 부산 사상구는 도시 기반시설에서 여성·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반영을, 청주시는 공공이용시설과 주거 단지 조성에 ‘여성친화건축설계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여성친화 지정도시의 공간관련 가이드는 지역사회를 성별·연령에 대한 차별 없이 교육받고 일하며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시민권이 보장되는 무장애 공간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무장애를 이동 편의 정도로 협소하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안전이 도시 공간 이용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보다는 물리적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으로 축소해 해석하는 경향 또한 있음.

여성친화도시 사업 중 공간 조성 사업은 단위 시설 개선 사업, 마을이나 일정 구역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 그리고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기 추진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방법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듯, 각종 공공 건축, 길 만들기, 마을 만들기, 도심재생 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이 공간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단위시설 개선 사업은 여성 편의 시설 설치도 필요하지만 공공시설이 출산 양육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여성의 자율적 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것 또한 필요함.

구역 단위 사업은 단순히 화장실, 주차장, 보도정비 등의 물리적 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넘어서 각종 사업 추진에 지역 여성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사업, 참여의 장애가 되는 돌봄 관련 시설 인프라 정비, CPTED 반영 안전 인프라와 보행 여건 개선 사업 연계 또한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동 관련 사업은 무엇보다도 차량 관련 시설 정비보다 보행 동선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으며 외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길로 여성친화도시의 의미가 축소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여성경제·문화 발굴 및 활성화 사업 등이 거리조성에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 공간 조성 사례

익산시와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 구역 사업을 통해 공간 조성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범구역 사업은 구도심 지역 공간 개선과 운영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구성되어 있고, 사업 추진 기반으로 지역 여성 리더 발굴 및 육성과 기관·단체 및 전문가와 행정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성이 포함되어 있음. 시범구역 지역 여성 주민은 소통, 안전, 특색 있는 마을이라는 방향의 공간·시설 개선 계획과 활동·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운영위원회와 지역여성,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공동 모니터링, 건강프로그램 제공 등 분과별 활동 간의 소통, 그리고 행정의 협력부서 회의가 함께 추진되었음. 이 과정에서 집 안 또는 여성 노인정에 머물러 있던 마을 여성들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업을 골목길 곳곳에서 기획·추진하면서 여성이 활동한 길과 장소를 중심으로 시범구역 공간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음. 또한 마을 활동을 통해 발굴된 지역 여성은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여성 요구와 행정활동의 연계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음.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시범 사업은 시흥시 성인지 통계와 시민참여단, 행정의 안전 모니터링 사업에 근거하여 정왕본동 지역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공모사업을 통하여 CPTED 방법을 적용한 학교 주변 통행로 확보와 공원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음. 사업은 기존 마을 주민조직인 마을 대표단, 시흥시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대표단, 시의원, 시흥 교육청 및 행정 각 부서 등이 공동 모니터링과 협력회의를 통해 수행되었음. 통행로를 확보하고 공원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 T/F구성 기반을 마련하였음. 또한, 지역사회 조사와 공동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대상지역 중 지속적인 주민참여 안전 모니터링 사업 구역을 세분화하고, 사업 구역 내 주민 활동 활성화를 통한 안전감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센터 조성계획 또한 수립하고 있음.

나. 지역사회 공간과 여성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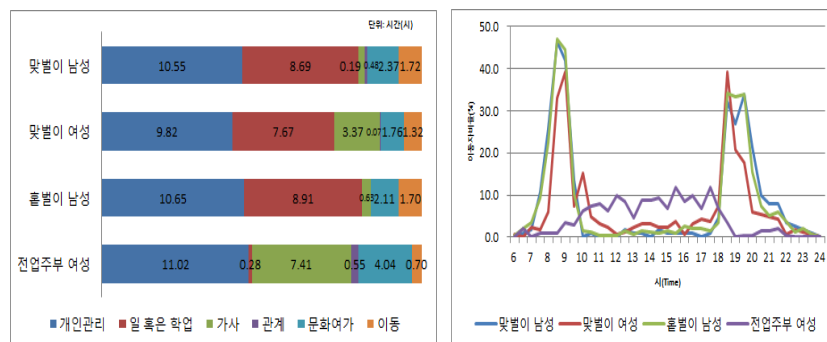
여성친화도시 추진 지자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

상으로 지역사회 생활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정주 여건 및 참여 여건, 요구를 분석하였음. 24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눠서 공간과 시간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 기관 및 이동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에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였음. 또한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이 여성의 참여에 기반한다는 측면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참여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음. 이들 분석에는 생활여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도시 규모, 집단별 특성(1인 가구, 전업주부, 맞벌이 가구, 장애인) 등이 고려되었음. 또한 지역, 가구, 고용형태, 자녀연령, 주거형태 유형을 고려한 성인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FGI)을 실시하여 이동 및 공간이용 실태와 요구, 생활시간을 분석하였음.

1) 공간 이용과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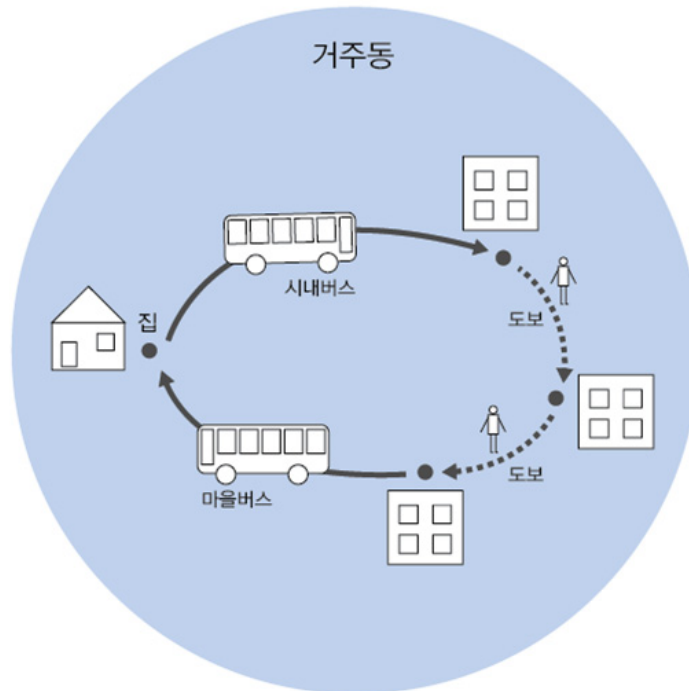
남성과 여성의 일상생활은 취업과 돌봄이라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기관 인프라의 설치와 배치에 따라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 또한 차별적임.

사회적 역할에 따라 생활시간의 이용 형태와 이동 시간 및 시간별 이동량, 그리고 이동시 동반자 유형의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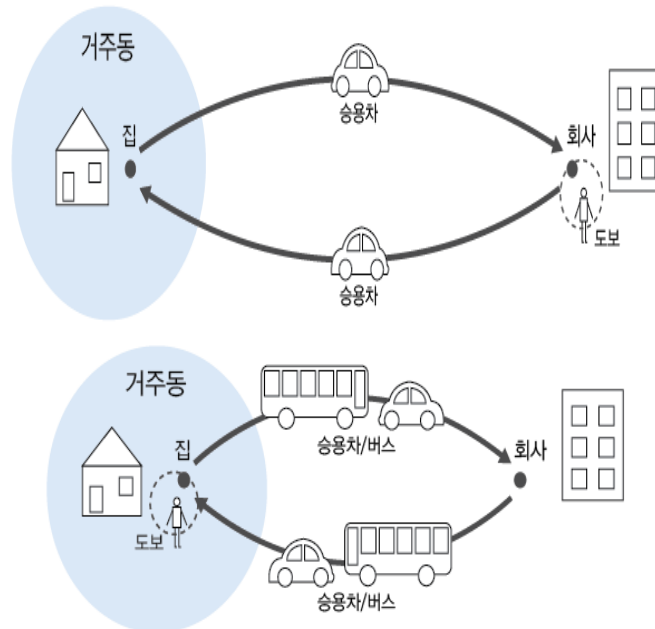
[그림 1] 생활시간 이용 현황(왼쪽)과 시간별 이동량(오른쪽)

이동 패턴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집단별로 보자면, 첫째 전업 주부의 일상은 주로 거주지 동 내에서 이루어지며 보행이동이 주류이고, 대중교통을 통한 단거리 이동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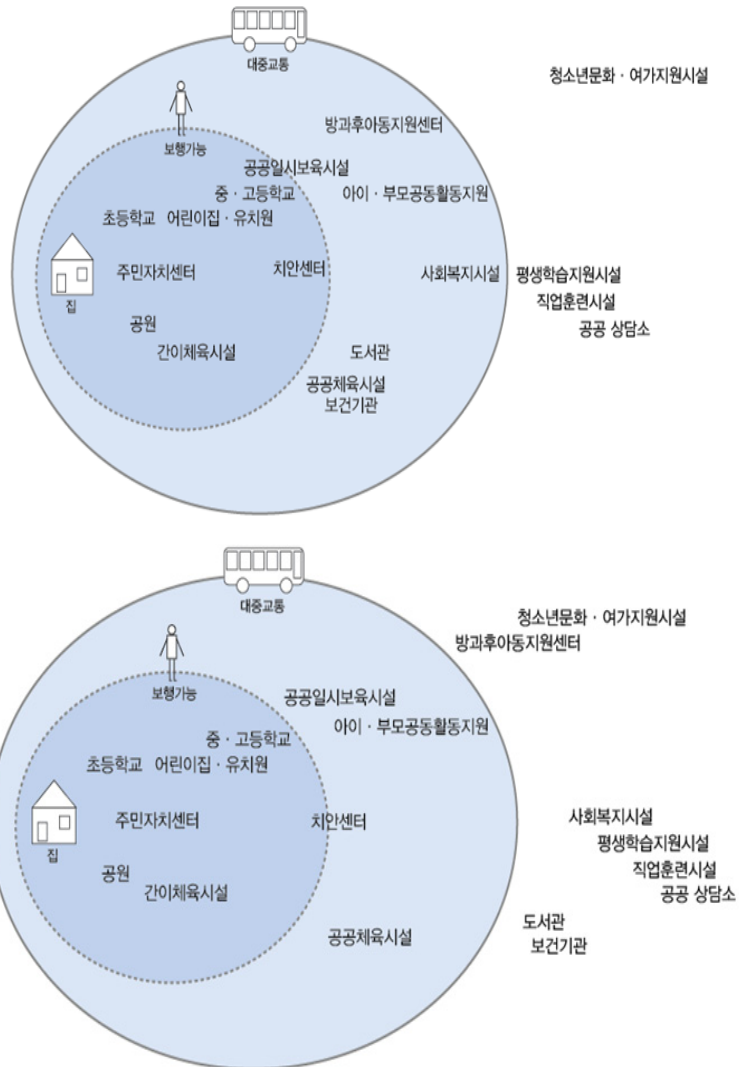
[그림 2] 전업 주부의 이동 패턴

취업 여성과 남성 역시 차별적인 이동패턴을 보여주는 바, 취업 남성의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만 승용차 이용이 많고 주 보행은 직장 주변에서 이루어짐. 취업여성은 상대적으로 근거리 취업이 다수이며 대중교통 이용자도 많으며 거주지 주변 근거리 보행이 주로 발생하고 있음.



[그림 3] 취업 남성(위)과 여성(아래)의 이동 패턴

공공시설 이용은 여성친화도시가 어떤 인프라를 어떻게 배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함.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근거리 이용 가능 시설이 부족하며, 특히 인적자원개발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돌봄 관련 시설의 원거리 배치와 대중교통 이용 접근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음.



[그림 4] 대도시(위)와 소도시(이래) 거주자의 생활 기반 시설 접근성

2) 젠더화된 공간과 형평성

도시경제기반을 최우선에 두고 용도별로 공간을 분할하고, 교통수단을 통한 연결을 중심에 둔 도시 공간과 돌봄과 관련된 공공시설 요구가

제도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공간 설계 및 일상생활요구 수용에 미비한 공공기관 배치는 성별·이동과 돌봄에 특수한 집단별로 생활기회의 차이를 가져옴.

이동에 대해서 남성은 전반적으로 교통 편리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안전을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하고 있으며 보행 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임. 신체적 장애가 있는 그룹과 노약자 등과 동반 보행 비율이 높은 여성에게는 이동 어려움이 사회 참여의 제약으로 인식되고 있음¹⁾.

공공기관의 균등하지 못한 배치 또한 생활기회를 차등화 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는 공공 기관 접근성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는 바, 도시 중심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주거지 등의 여건으로 접근 기회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음²⁾.

남성은 시간사용에 자녀 유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유자녀 취업여성은 취업여성 평균과 비교해서도 개인관리, 일 혹은 학업, 관계, 문화여가 시간 사용 감소분만큼 가사 및 돌봄 활동시간이 증가하는 경향

1) “유모차 가지고 병원 가려면 한 시간 이상 걸려요. 사실 나 혼자 걸어가면 10분이면 갈만한 거리지만, 유모차를 끌고 가기는 너무 어렵지요. 울퉁불퉁하고 그 조그만 인도에 가로등이나 나무, 신호등 다 있어요. 애를 데리고 나갔다고려면 만나절은 걸려야 되요. 택시탈만큼 급한일이 아니면, 안 나오는 편이지요. 애가 클 때까지는”

“사실 큰 길거리는 생각보다 많이 안 다녀요 제가. 동네 여기서만 생활 하니까. 애 둘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요. 차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띠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좀 지나서 손으로 안고 타야지 버스를 탈 수 있는데 애들 둘을 데리고 버스 타는 건 불가능이지요. 또 7, 8키로 되는 아이랑 유모차 무게까지 통째로 들고 내리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2) “공공기관은 많은데 다 따로 따로 가야해요. 예를 들어 일자리 관련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과 직업훈련기관 찾아야 되고. 항상 필요한 공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용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면 노동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거 이외에 내가 동네 보건소를 가려고 하면 구청 홈페이지를 가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애들 보면서 다니려면 몇 일을 다녀야하고, 정보라도 종합되어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한참 찾아야 하고요. 인터넷 못 하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이 있음. 돌봄 인프라의 다양화와 근거리 위치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생활기회의 제약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전반적인 사회 활동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여성들은 마을 범위를 넘어서는 공간의 공평한 이용 문제까지는 일상의 관심사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과 행정 연계 활동에 대한 참여 요구는 현재의 참여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성별로 균형 잡힌 생활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사회적 접촉을 거주하고 있는 동 내부에서 충족시키는 것, 또는 다른 하나는 각종 삶의 기회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심부까지 이동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화된 돌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함.

3 정책제언

제안1) 공간 조성 사업 추진의 법·제도적 근거 강화

첫째,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의 근거가 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또는 지자체 성평등에 관한 조례의 근거 규정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리 안전 공간 확충, 안전한 이동 도모를 위한 안전한 보행 및 교통시설 이용, 공공 건축물에 돌봄시설 설치, 근린생활권 단위 공간 개선 추진을 위한 성평등 지구의 지정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능함.

둘째, 생활권 중심 인프라 조성 과 여성 친화 시범 구역(또는 성평등 지구) 관련하여 관련법에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내용 반영이 필요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도시 기반시설 범위에 공공 돌봄 시설(방과 후 아동 지원센터, 일시보육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조항에 성평등 문구 삽입, 주민이 만드는 평등한 커뮤니티조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 가능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역균형개발 계획에 안전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 사업 규정 명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교통 이용 편의시설 규정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서 성 평등 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 가능함.

이와 같은 법률적 개선 이외에 계획수립 지침이 형식적, 기술적 틀을 벗어나 지역의 수요와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음. 특히, 지구단위관리지침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몇 개의 시설·설치를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음.

제안2)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추진 체계화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부응하는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별 여성친화도시의 관련 조례에 공간 조성 사업의 목표와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 있음.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중심 균형 잡힌 사업 계획 수립 필요성, 생활 기반 시설 범위 명시, 보행연계 및 이동 안전, 공공기관 참여 지원 공간 조성, 공공서비스 제공기반 시설 조성계획 수립 시 지역여성 의견 반영 근거 마련, 관련 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주무부서와 협의할 책무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 명확화할 수 있음. 『성평등 기본 조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방향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성평등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정책 개선 내용에 근린생활권 내 성별 균등한 생활 기회 확충과 근린생활권 간 인프라 균형 내용 및 지역 여성의 의사결정참여를 포함할 것을 명시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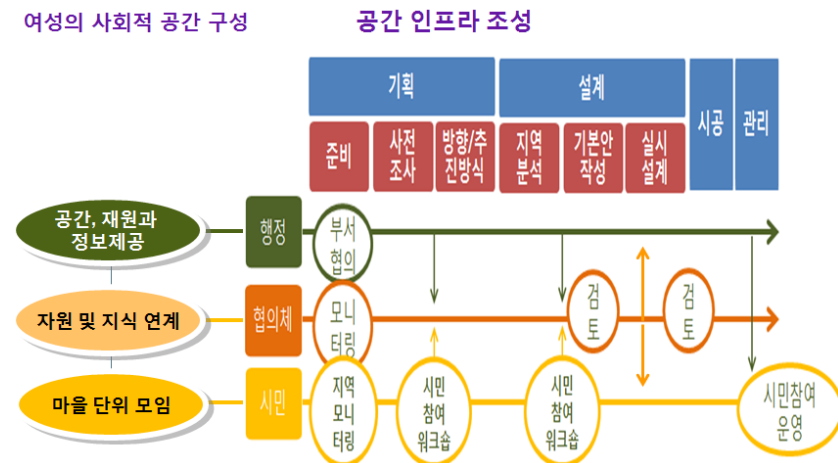
개별화된 공간 조성 사업들을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집약하고 공간 조성 사업에 지역의 다양한 여성 그룹을 함께 참여시키는 시범 사업 추진이 필요함. 시범 사업에는 시민참여단의 참여 계획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제안3)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추진체계 운영

여성친화도시에서 공간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부서들임. 그렇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서 간 협업이 기본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또한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은 지역 여성들에게 사용 가치가 높은 장소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할 때, 지역 여성의 참여가 연계되어야 하며 여성들의 목소리를 공간 용어로 변경시키고 공간적 형태로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협력 또한 추진되어야 함.

다시 말해, 여성친화도시에서 공간 개선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사업 부서간 업무협약,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의 공간 조성 사업 전 과정에 참여가 추진되어야 함.



[그림 5] 공간 조성 사업 추진체계 운영

제안4)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지원의 전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여성의 경험에 기반 해서 공간을 새롭게 보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적어도 광역 단위에서 도시설계, 교통, 주택, 건축 등 분야별 공간 관련 전문가 발굴을 통하여 해당 범위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공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또한, 공간 관련 전문가들이 지역 여성의 다양한 생활 여건 등을 이해하고 성평등 문제에 민감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 워크숍이나 포럼 등의 상설화가 요청됨. 특히 그룹 워크숍이나 포럼은 기존에 컨설턴트로 활동하던 여타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도 상호 교차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고, 통행량 조사나 지역사회 생활 만족도 조사 등의 원자료 분석을 통한 지역 여성 여건 분석,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서 근린생활권 정책 분석, 개별 여성친화도시 근린생활권 기반 인프라 현황 점검 등의 기본 현황 분석과 공유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공간 조성 사업은 구체적인 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여성친화도시 공간 전문가 그룹이 직접 설계나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모색되어야 공간 개선의 현실적인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제안5)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인프라 조성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은 돌봄을 지역사회의 가치있는 일로 만들고 모든 시민이 일과 돌봄과 지역문화 창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적 지원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토지이용의 복합화는 일과 주거·상업·여가 등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근거리 이동을 주로 하는 여성의 생활 기회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음. 하지만 토지이용의 복합화가 지자체 내 한 두 개의 대형 복합화 시설 설치로 협소화된다면, 공공 서비스의 주 이용자인 여성의 생활기회와는 무관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음.

보행과 대중교통을 중요한 공간 이동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이 됨. 따라서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하는 이동 정책은 보행과 대중교통의 연계, 클러스터 형태의 산업단지와 주변 거주지를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연계하는 TOD 개발 방식 등이 고려되어야 함. 특히, 대중교통시스템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심이 필요한 바, 버스나 지하철의 배차 간격과 시간대, 정거장의 위치와 연계, 대중교통 시설의 노약자 동반자에 대한 고려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

제안6) 여성의 임파워링 과정과 연계된 공간 조성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이 모든 시민을 일과 돌봄 그리고 지역문화 창조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여성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공간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라면,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함께 추진되어야 함. 어떻게 생활을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곧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임.

이런 점에서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은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공간 조성과 관련된 정보를 유통시키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성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즉, 각종 도시 조성 관련 위원회 여성 참여와 전문가의 공간 조성 과정에의 참여는 공간 조성 사업 참여의 일부로써 지역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는 제한적이기 때문임.

이와 같은 참여 기제를 일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여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참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일상생활로부터 지역사회 공간 사용 계획과 활용의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공간 조성 사업 전반에 여성의 일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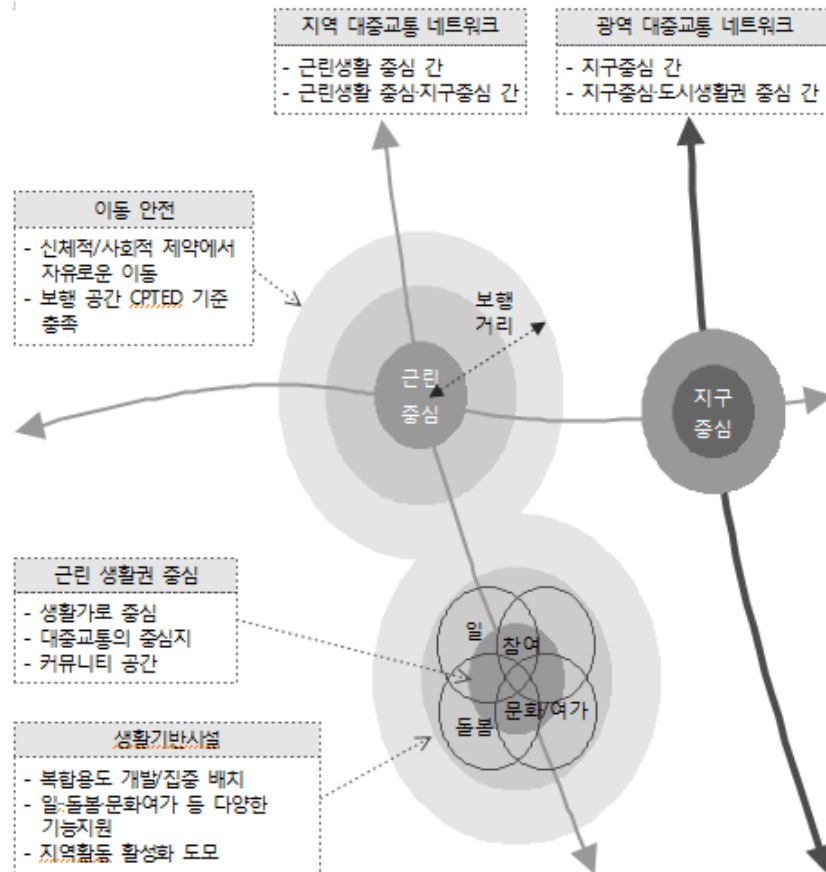
둘째,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여성의 활동 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개방적인 공공 공간은 여성들의 말할 기회와 만날 기회를 확장시켜, 일

상생활에서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과 지역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에 개입할 기회와 자원 유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제안7) 생활권 구조와 생활기반시설의 정책적 연계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권은 이웃 간 면식 가능한 보행권인 근린분구들을 기초로 하여 주민 간의 상호작용이 유지되고 보행이동이 가능한 근린주구를 범위로 설정할 수 있음. 보행이동이 가능한 근린분구와 주구는 거리상으로 각각 반경 250m, 500m를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으나 지역별로 가로의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제 도보로 5분, 10분간 도보로 이동할 수 거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범위가 될 수 있음. 그리고 지구중심생활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한 번에 또는 마을버스 등으로 쉽게 환승하여 이동할 수 있는 범위로 하며, 도시생활권은 하나의 완결된 공간적 체계를 이룸.

근린주구 단위로 필수적인 생활기반시설이 설치되거나 적어도 시설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기능이 지원되어야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음. 특히, 근린주구 별로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어야 지역사회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 공간은 대중교통 및 보행가도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 이와 같은 근린주구 단위는 지역 및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통해서 지구중심생활권 단위에 설치되는 전문적인 교육·일·돌봄·여가 등의 지원기관에 연계될 수 있어야 함.



[그림 6] 생활권 공간구조

생활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집약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공간 정책 뿐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여성친화도시의 생활지원 서비스는 각 분야 간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공간구조의 형태 및 구성방식과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연계가 요구되는 각 분야별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첫째, 대중교통 관련 교통정책과 연계가 필요함. 여성친화도시의 근린생활권, 지구생활권, 도시생활권의 중심지는 대중교통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될 필

요가 있음. 근린생활권의 중심은 대중교통 정거장을 중심으로 하거나 중심지에 인접하도록 하여 근린생활권 보행거리 내에서 대중교통 정거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행 환경 개선과도 연계되어야 하는 바 어린이 및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대책과 관련된 보행우선구역 확대뿐만 아니라 보행 도로 미확충 구간을 줄이고 보행자 중심으로의 대중교통 편의시설 도입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지구중심생활권은 대중교통으로 10-15분 거리의 공간으로 구성하되, 근린생활권으로부터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에 중심지를 구성함. 역세권 중심의 토지이용 사업 구상 시 고려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계획에서 돌봄 시설 배치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음.

둘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과 관련된 주거안전망 구축은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주거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함. 주거안전망에는 ‘부부-아이 중심’의 가구 형태이외의 다양한 가구의 요구를 반영하는 주거를 제공해야 함.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노후지역 환경 개선 사업, 특히 수복형 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추진 대상지역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정비 뿐만 아니라 생활여건 개선과 관련된 부대·복리시설 개선도 적극 고려하고 주거지역 전반의 안전 개선 사업 병행도 고려되어야 함.

셋째, 지역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근린 및 지구 중심에 다양한 지역 일자리가 위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등의 지역 일자리 정책과 연계도 모색되어야 함. 근린 중심에 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활동 공간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이 공간이 주거지에서 보행이나 대중교통으로 10-15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될 때, 지역 여성들이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음.

4 기대효과

-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이 도시 공간에 대한 공평한 이용 뿐만 아니라 공간 조성 사업의 효과가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귀결되기 위하여 ‘여성의 공간 창조’와 매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의 방향을 정립,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의 이론적 토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범위를 제안하고, 국내 도시공간 계획 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화함으로써 사업 추진 시 혼란을 줄이고 성평등한 공간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와 기회 요인, 민관 협력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익산시, 시흥시)를 통해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 방법 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강미선 외. 2009. “가족개념의 대안에 기반한 주거정책의 거시적 방향 제안-‘돌봄 공유’의 물리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8):81-90.
- 김경수. 2007, 『현대건축의 전개와 미학, 현대의 예술과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양희 외. 2008.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김현미. 2007. “성역할, 접근성, 그리고 젠더화된 공간성”. 대한지리학회지 42(5):808-834.
- 김현미. 2008.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도시기회 접근성의 시·공간적 구축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23(2-3).
- 김홍순. 2006. “여자들의 공간과 자본: 지구화시대 한국사회의 여성적 빈곤과 공간적 대응”, 한국여성학 제21권 3호:5-37.
- 뉴 어바니즘 협회. 안건혁 외 옮김. 2009. 뉴 어바니즘 현장: 지역, 근린주구·지구·회랑, 블록·가로·건물(Charter of the New Urbanism 2003). 한울.
- 다니엘 팽송. 정진국 옮김. 1999. 『건축과 근대성』, 영림카디널.
- 맥도웰, 린다.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Gender, Identity and Place(1999), 서울: 한울.
- 문유경 외. 2012. 『여성친화점검지표 개발 및 이행현황 분석』. 여성가족부.
- 안숙영. 2011. “젠더와 공간의 만남을 위한 시론 :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제21권 제2호:7~37.
-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Lefebvre, H. 1968. “Right to the City.” Kofman and Lebas translated and edited. Writings on Cities. Blackwell.).
-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역. 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Lefebvre, H. 2000. The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ECONOMIA).

- 양애경 외. 2011. 『여성친화 지정도시 이행점검 연구 및 컨설팅』. 여성가족부.
- 여성부. 2009.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추진계획
- 여성가족부. 2011.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
- 여성가족부. 2012.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계획.
- 유희정 외. 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여성가족부.
- 이미원. 2009.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 여성부.
- 이선영. 2013. “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도시공간구조”, 서울대환경대학원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이현재. 2012. “여성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텅 빈 공간에서 가임의(pregnant) 코라 공간으로”, 젠더와 문화 제5권 1호:41-69.
- 장미현. 2013. 『도시 및 건축분야의 성인지적 분석모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영미. 2009. “여성 친화 도시 만들기 정책의 실제과 과제: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제25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51-69.
- 최유진 외. 2012. 『지역사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천현숙 외. 2012.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 최현선 외. 2006. 『스마트 성장과 비전수립 과정:플로리다 주 잭슨빌 시 사례』. 국토연구원.

- Beall, J. 1996. Urban Governance: Why Gender Matter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Gender in Development Monograph Series No. 1, March
- Beall, J. 1997. A city for all: valuing difference and working with diversity. Zed Books, London.
- Beall, J. and C. Levy. 1994. “Moving Towards the Gendered City”, paper

prepared for the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s (Habitat) for the first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Habitat II, Geneva, April, 1994.

Caroline Moser. 2012. Mainstreaming women's safety in cities into gender-based policy and programmes, *Gender & Development*, 20:3, 435-452

Dikeç, M, Gilbert, L & Dikeç, M. 2002. "Right to the city : Homage or a new societal ethics?"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3(2):58-74.

Elshtain. 1981. *Public Man, Private Woman*

Fenster, T. 1999 Space for gender: cultural roles of the forbidden and the permitted,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7, pp. 227-246.

Fenster, Tovi(ed). 1999. *Gender, Planning, and Human Rights*. London: Routledge.

Fenster. Tovi. 2005. "The Right to the Gendered City: Different Formations of Belonging in Everyday Life". *Journal of Gender Studies*. Vol.14 No.3. pp.217-231.

Fincher, R. 2004. "Gender and Life Course in the Narratives of Melbourne's High-rise Housing Developers." *Australian Geographical Studies*, 42(3), 325-338.

Gibson-Graham J. K. 2006. *A Postcapitalist politics*, Minneapolis,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Gibson-Graham. J. K. 1996. *The End of Capitalism(as we knew it)*, Malden, Oxford: Blackwell.

Jacqueline Leavitt. 2003. Where's the Gender in Community Development?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 29, no. 1]. 207-231

Monika Jaeckel, Marieke van Geldermalsen. 2005. "Gender Sensitive Urban Planning", *URBANISM AND GENDER* conference(Barcelona)

Moser, C. 1993. *Gender, Planning and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 OECD. 1995. Women in the City, Housing, Services and the Urban Environment,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 OECD. 1991. urban infrastructure : finance and management)
- Office for Women' Affairs & Gender Equality. 2006. Gender Alp!. Spatial Development for Women and Men, Salzburg.
- Peleman K. 2002. The impact of Residential Segregation on Participation in Associations: The Case of Moroccan Women in Belgium, Urban Studies 39(4), 727-747.
- Petra L. Doan. 2010. The tyranny of gendered spaces - reflections from beyond the gender dichotomy, Gender, Place & Culture: A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17:5, 635-654
- Purcell, M. 2003.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the global city: reimagining the capitalist world 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7(3), pp. 564-590.
- Purcell, M. 2002. "Excavating Lefebvre: The Right to the City and Its Urban Politics of the Inhabitant." GeoJournal, 58.
- Fincher. R. 2007. Space, Gender and Institutions in Processes Creating Difference, Gender, Place & Culture: A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14:1, 5-27
- Yucel. S. 2012. Feminist practices: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women in architecture, Gender, Place & Culture: A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19:4, 552-553
- Hanson Susan. 2010. Gender and mobility: new approaches for informing sustainability, Gender, Place & Culture: A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17:1, 5-23
- UN-Habitat. 2008. The Global Assessment on Women's Safety, Nairobi: UN-Habitat Women in Cities International (2010)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men's Safety: Building Inclusive Cities, Conference Background Paper', www.femmesetvilles.org/pdf-general/Final%20Conference%20Background.pdf (최종 검색 2012)

- Young, I. M. 1998. Polity and group difference: a critique of the ideal of universal citizenship, in: G. Shafir (Ed.) The Citizenship Debate, pp. 263-290.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Young, I. M.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Yuval-Davis, N. 1997. Gender & Nation. London: Sage.
- Yuval-Davis, N. 2000. Citizenship, territoriality and gendered construction of difference, in: E. Isin (Ed.) Democracy, Citizenship and the Global City, pp. 171-187. London: Routledge.
- Fraser, Nancy. 1995. "From redistribution to recognition? Dilemmas of justice in a 'post-socialist' age", New Left Review, (212), pp.68-93.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50개 여성친화 지정도시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